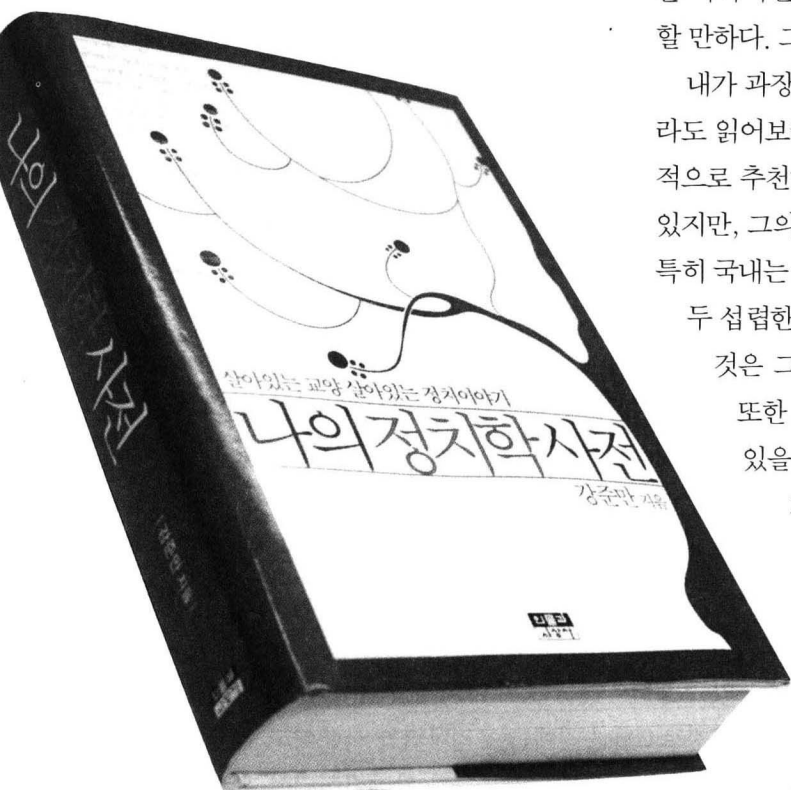


IMF에 대한 대표 지식인의 잘못된 인식

글_ 최용식



나는 강준만의 열렬한 팬이다. 그의 학자적인 탐구 자세가 나를 그의 열렬한 팬으로 만들었다. 나는 그를 도저히 따라할 수 없을 것 같기에 더 열렬하게 그를 동경한다. 그가 얼마나 치열하게 학자의 길을 가고 있는가는 그의 글쓰기에서 쉽게 드러난다. 아무나 흉내 내기 어려운 다작이면서도, 각각의 글에 쏟는 그의 노력은 가히 살인적이라고 할 만하다. 그만큼 열심히 연구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내가 과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그의 글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라. 그가 쓴 많은 책 중에서도 《나의 정치학 사전》을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다. 이 책은 그의 전공인 언론학과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그의 학자적 자세를 확인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특히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 발표한 글이나 출간한 책들을 거의 모두 섭렵한 뒤에 자신의 견해를 확립해가는 것이 눈에 띈 것이다. 이것은 그가 평소에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가를 보여줄 것이다. 또한 그가 얼마나 건전한 인식세계를 갖추고 있는가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책이 지성인으로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상식적인 식견들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그가 쓴 글이나 그의 인식세계에 모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내 전공인 경제문제에 있어서는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언론학이라는 인문과학을 전공한 그에게 비교적 생소할 것이 확실한 사회과학적 접근자세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일지도 모르지만, 경제문제만은 경제의 운동원리를 먼저 이해한 후에 접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소 엉뚱한 결론을 도출하곤 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런 관점에서, 강준만의 경제인식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그는 이미 유명인으로서 지식인 사회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기에, 그의 잘못된 경제인식이 불러올 파장은 그만큼 크다고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나는 그의 열렬한 팬이기에, 그를 가장 가혹하게 비판할 자격이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우선, 그가 제기한 'IMF 환란'의 문제를 따져보도록 하자.

강준만은 “금융은 정부의 통제 밖에 있다. 그래서 국제적 환투기가 벌어져도 정부는 속수무책이다”(680쪽)라고 말한다. 그 의미는 국제적 환투기가 환란을 불러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게 진상의 전부일까? 환투기는 언제나 그리고 어디에서나 항상 일어나는 것일까? 그건 아니다. 환투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는 곳

●이 글을 쓴 최용식은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5년간 대한투자진흥공사에서 근무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과학적으로 해체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세우겠다는 뜻을 품고 직장을 그만둔 뒤 30년 넘게 이 문제에 천착했다. 현재 21세기경제학연구소(www.taeri.org)를 운영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글쓰기 작업을 하고 있으며 쓴 책으로는 《사상과 경제학의 위기》 《경제역적들이 들려라》 《대한민국 생존의 속도》 《대한민국 생존의 경제학》 등이 있다.

에서만 일어난다. 사정이 이렇다면 투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정책당국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실제로 우리나라는 환란 전 4년 동안의 국제수지(경상수지) 적자 누적액이 무려 440억 달러였고, 이 규모는 1990년대 중반까지의 외환보유고보다 두 배나 많았으며, 결국 외환보유고는 고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것이 환투기 환경을 조성했다고 해야 한다. 따라서 국제수지 적자를 이만큼 키운 경제정책이 무엇이었던가를 먼저 따져야 했다. 통계만 확인해봤더라면 그것이 통화와 재정의 팽창에 있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즉, 통화와 재정의 팽창이 국내수요를 생산능력보다 더 크게 증가시켰고, 결국 수입이 폭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통화와 재정을 팽창시킨 정책당국자를 찾아서 그에게 책임을 물었어야 했다. 그러나 이런 일에는 강준만은 물론이고 국내 대부분의 경제학자들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강준만은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1997년 말 한국을 절망과 좌절 속으로 몰아갔던 외환위기 사태가 발생했을 때, 한국을 세 차례 방문했던 IMF 총재 미셸 캉드쉬는 영락없이 ‘식민지를 시찰하러 온 경제 총독’이었다”(682쪽)라거나, “캉드쉬는 가는 곳마다 한 손에 구제금융을, 다른 한 손엔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공기업 민영화’, ‘자본의 자유화’, ‘노동 시장 유연화’ 등과 같은 카드를 들고 미국 월가와 투기자본가들의 입맛에 쏙 드는 말만 늘어놓는다. 그가 처방을 내리고 간 곳에는 예외 없이 실업자가 생산됐으며, ‘20대 80’으로 정의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683쪽)라고. 또한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자 제프리 삭스, MIT의 경제학자 폴 크루그만, 세계은행 부총재를 지낸 조지프 스티글리츠 등 우파의 견해는 물론이고(684~685쪽), 마이클 엘버트나 노암 촘스키와 같은 좌파 경제학자들의 견해를 덧붙여(686쪽과 688쪽), 그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그렇다면 물어보자. IMF는 외환위기에 처한 나라들을 무조건 구제해주는 자선기관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구제금융은 반드시 상황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야 IMF가 계속 존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상황이 보장될 수 있을까? ‘공기업 민영화’와 ‘자본의 자유화’와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같은 정책을 펼치지 않고도 외환위기에서 벗어난 나라가 하나라도 있는가? 이런 정책을 가장 철저하게 펼쳤던 대한민

국이 세계사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그리고 가장 단기간에 극복한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마치 IMF가 처방한 ‘공기업 민영화’와 ‘자본의 자유화’와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이 실업자를 양산하고 빈부격차를 키운 것처럼 지적인 사실이다. 만약 이런 처방을 하지 않았더라면 실업자 증가와 빈부격차 확대가 과연 나타나지 않았을까? 아니다. 환란이라는 경제재앙이 이미 닥쳤다면, 당연히 실업자는 증가하고 빈부격차는 확대될 수밖에 없었다. 왜 그럴까? 환란이 닥치면 환율이 급등하고, 그러면 수입물가는 폭발적으로 상승하며, 실질구매력은 떨어진다. 경기는 하강하지 않을 수 없으며, 경기가 부진해지면 해고를 당해도 못사는 사람이 먼저 당하고, 기업이 망해도 영세업체부터 망하며, 이에 따라 빈부격차는 확대되기 마련이다. 강준만은 환란의 결과를 마치 IMF 처방의 결과인 것처럼 잘못 인식한 셈이다. 오히려, 최소한 우리나라에 있어서만큼은 IMF의 처방이 실업자의 양산과 빈부격차의 확대를 크게 줄였다고 해야 한다. 만약 IMF의 처방을 충실히 따르지 않았다면 경기부진은 장기화했을 것이고, 실업률은 더 높아지고 빈부격차도 더 커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화’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나는 그의 견해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그는 “미국의 경우 빈부격차가 극도로 심화된 게 세계화와 관련된 신자유주의 정책을 편 레이건 행정부 시절의 1980년대였다는 건 당연한 일이다”(510쪽)라고 말한다. 진짜로 세계화가 빈부격차를 확대하는 것일까?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 빈부격차가 확대되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경기부진이 장기화하거나 경기변동이 심하고 그 진폭이 클 때에 빈부격차는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해고를 당해도 못사는 사람들이 먼저 당하고, 망해도 영세업체가 먼저 망하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미국 빈부격차의 확대도 새롭게 볼 필요가 있다. 즉,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펼친 뒤에 나타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정책의 결과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1960년대 말부터 나타났던 스태그플레이션의 결과라고 해야 한다. ■■